

## “한맺힌 73년 보상하라”...국회서 ‘여순사건특별법’ 촉구

“비극적 역사 왜곡된 진실 규명·아픈 과거 보상하라” 호소  
여수시장·여수시의회 특위·여순사건 유족회 등 한목소리

여순사건 유족회와 여수지역 정치인, 여수시장이 28일 국회 앞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와 서울 유족회를 비롯해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 정치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기대됐으나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4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수시와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지금이 국회의 문을 더 힘차게 두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결의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은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주도로 특별법안 처리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를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4월 통과되지 않은 아쉬움을 담았다.

유족들은 최근 순천과 여수를 잇따라 방문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월 통과를 약속한 점을 상기하고 늦었지만 5월에는 반드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요구했다.  
여순사건 서울 유족회와 회원들도 결의대회에 참여해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했다.  
유족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면서 “73년의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방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한 길뿐이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73년이라는 유난히도 길었던 지난 세월을 숨죽여 감내해야 했던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정이 가장 큰 현안으로 삼고 시장으로서 특별법 제정에 헌신을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2시 CGV영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 여수시의회 특위 등이 총출동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등포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유족회 등을 초청해 여순사건을 주제로 제작한 영화 ‘동백’ 시사회를 열고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렸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으며,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발발지이자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조례 제정과 아울러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영화 제작, 홍보단 구성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광주시, 다음달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인상한다

승용 8만→12만원·승합 9만→13만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시범 설치키로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다음달 11일부터 인상된다.  
광주시는 28일 “자동차 안전속도 5030을 조기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60km의 주행속도를 50km로 줄이고 교통소통에 지장없는 이면도로 등은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전역의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하고, 2년 이상 준비와 유예 기간을 거쳤다.

5월 11일부터는 스쿨존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오른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스쿨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발견된 즉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에 나서고, 주요 교차로와 상습 정체 구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

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심 내 승용차량 운행 억제와 환경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한다. 지하철 공사 구간과 차로가 좁은 지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해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도 5월부터 바뀐다.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구, 공유서비스 업체간 설치 장소, 허가 절차 등을 협의해 시내 주요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선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 코로나19, 10세 ↓ 100명·70대 ↑ 300명 넘어

50대 최다...4명 중 1명 20~30대  
최고령 104세·최연소 생후 9개월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갓난 아이와 10대 미만 영유아동의 수가 100명을, 70대 이상 어르신이 300명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확진자 4명 중 1명 꼴로 20~30대여서 젊은층 감염도 적지 않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초 첫 감염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99명에 이른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 영유아동이 102명(4.3%)에 이르고, 10대 청소년 225명(9.4%), 20대 335명(13.9%), 30대 249명(10.4%), 40대 362명(15.1%) 등이다.또 50대가 476명(19.8%)으로 20%에 육박하고, 60대(350명, 14.6%), 70대(159명, 6.6%), 80대(107명, 4.5%)도 세자릿수를 기록중이다. 90대 이상 초고령층도 34명(1.4%)이나 감염됐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5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20대, 30대, 10대 순이다.  
초·중·고등학생이 대다수인 10대가 가족 간 감염 등의 여파로 200명대에 달하고, 20~30대 젊은층도 24.3%나 차지했다.  
고령 확진자도 끊이지 않아 전남 확진된 서구 거주 2386번 확진자가 70대 이상 300번째 고령 확진자로 분류됐다.  
최고령 확진자는 광산구에 거주하는 A할아버지로 올해 나이 104세다. 올해초 효정요양병원에서 6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지 1주일 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염병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었다.  
최연소자는 생후 9개월된 갓난 아이로, 제사를 지내러 전남 곡성을 찾았다가 지인 모임에서 감염된 서울 동작구 884번 확진자와의 접촉 후 양성 판정됐다. 아이와 함께 있던 가족 등 2명도 함께 확진됐다.  
최윤희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 합평

#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 2회 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합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http://www.hpcc.co.kr) 문의 061)320-2225